

선조위 “세월호 내달 10일 직립”

누워있는 세월호 선체가 내달 10일 바로 세워진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준)는 18일 서울 중구 서울사무실에서 열린 ‘세월호 선체 직립 공사 경과 보고회’에서 누워있는 세월호 선체를 바로 세우는 직립 작업을 내달 1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선체 직립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대삼호중공업(대표이사 사장 윤문균)은 당초 내달 30일을 선체 직립 D-day로 설정한 바 있다.

선체 직립을 위한 철제 빔 설치 작업이 20여일 빨리 끝나 당초 예정된 작업 날짜보다 20일 앞당겨진 것이다

선체 직립 작업을 맡은 현대삼호중공업은 선체를 부두와 평행하도

‘세월호 선체 직립 공사 경과 보고회’

50톤 철제 빔 무게 포함 총 1만430톤

록 90도 회전시킨 뒤 해상크레인으로 들어 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월21일 누워 있는 세월호를 특수운송장비인 모듈트랜스포터를 이용, 목포신항 부두 끝 60m 지점까지 옮겼다. 세월호 육상 거치가 완료된 지 31일 만이다.

또 선체 외부에는 인양과 수색과 점에서 뚫은 100여 개의 구멍을 메우는 작업을 진행했다. 내부적으로 파손이나 훼손이 심한 부분에 철제 구조물을 보강했다.

세월호 선체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미 설치된 33개의 수평 철제 빔에 ‘L’자 모양의 수직 빔 33개를 결합한 뒤 1만 톤급 해상 크레인과 수평·수직 빔 66개를 각각 외이어로 연결하고 천천히 돌려 선체를 바로 세울 예정이다.

현재 세월호의 무게는 6950여 톤으로 추정된다. 세월호를 감싸고 있는 철제 빔 등의 무게를 합치면 1만430여 톤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신창규 현대삼호중공업 부장은 “선체 중량 무게 중심은 선체 이동하고 나서 SPMT 모듈트랜스포터로 정확하게 측정했다”며 “선체 구성구

석을 다니면서 무게가 맞는지 점검했고, 최종적으로는 직립해야 하는 중량이 1만430톤이라고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신 부장은 “수직 빔이 지렛대 역할을 한다. 1만 톤 해상 크레인으로도 운행하는데 문제없다. 해상 크레인 용량의 90% 이내에서 운용하도록 설계했다”며 “무게 중심도 높이 방향으로 측정했고, 오류 부분까지 고려했다. 여유까지 고려해서 최악의 조건에서의 하중을 측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상 크레인에 부하가 걸리는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600톤급 육상 크레인도 예인선 2척이 대기한다.

뉴스스

무안서 건물 지하주차장 차량화재

18일 오전 11시54분께 무안군 삼합읍 한 건물 지하 3층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불이났다

불은 차량 1대를 태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30여분만에 진화됐다.

차량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 주차장에는 차량 20여대가 주차돼 있었지만 추가 피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차장에 설치된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무안=이기성 기자

완도해경, 복어 독 중독 50대 여성 긴급 이송

복어를 섭취한 뒤 마비증상을 보인 50대 여성이 해경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18일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8시10분께 완도군 노화도에서 A(54·여)씨가 복어를 먹고 마비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경비정 등을 급파해 신고 15분여만에 노화도에 도착, A씨를 해남의 한 병원으로 옮겼다.

A씨는 이날 자신의 집에서 참복을 섭취했으며 손글과 허 마비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잘못된 복어 요리를 먹고 복어 중독돼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복을 내포한 식재료를 다룰 때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섭취 후 몸에 이상 증상이 느껴지면 곧바로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고객 보험금 가로챈 보험설계사 구속기소

고객에게 지급된 암 보험금을 가로챈 보험설계사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18일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A(38·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7월 14일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은 고객 B(59·여)씨의 통장계좌로 지급된 암 보험금 200만 원을 포함해 총 35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보험을 실효시켜야 한다”고 B씨를 속인 뒤 통장과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고급 승용차를 임대해 타고 다니면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사기 행각을 벌였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 금액을 모두 갚겠다”고 약속해 구속을 피했다.

그러나 이후 피해 금액 변제가 되지 않자 검찰은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대구지법은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주점서 경찰관에게 욕설·난동 60대 입건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8일 주점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린 A(61)씨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10분께 부산 해운대구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가게 영업을 마쳤으니 나가서 귀가하라”며 자신을 깨우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하다 경찰 피하려던 30대 추락사

지인들과 도박을 하다 경찰이 출동하자 건물 외벽으로 숨었던 3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다

18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5시50분께 전주시 인후동 한 모텔 6층에서 A(35)씨가 떨어져 숨졌다.

A씨는 당시 지인 5명과 함께 포커와 홀라 등 도박을 벌이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문을 두드리자 A씨는 창밖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된 곳으로 피했지만 발을 헛디뎠다 건물 아래로 추락했다

뉴스스

전남경찰청, 지방선거

범죄 52건·118명 조사

전남경찰청은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 불법행위와 관련, 지난 16일 기준 52건(118명)에 대한 수사를 벌여 이중 17건(27명)을 종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나머지 35건 91명에 대해서는 현재 내사 또는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사전선거운동 18건(27명), 금품제공 18건(28명), 흑색선전 5건(8명), 공무원선거개입 5건(5명), 여론조작 4건(48명), 기타 2건(2명)이다.

전남경찰청은 선거차안 확보를 위해 지역 내 22개 경찰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열고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특히 금품선거·흑색선전·여론조작·선거폭력·불법단체 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5대 선거범죄 등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광주경찰도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재 9건 12명을 조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사전선거 3건 3명, 금품제공 3건 4명, 허위사실공포 2건 4명, 공무원 개입 1건 1명이다.

김정환 기자



셋강 생태개선 위한 미꾸라지 방사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셋강생태공원에서 관내 어린이집 원생들이 셋강에 미꾸라지 방사를 하고 있다. 한강사업본부는 이번 행사에서 여의도 셋강 수질 개선 및 모기 퇴치를 위해 토종 미꾸라지 5천여 마리를 방사했다.

염전노예 피해자, ‘부실 재판 1억 배상하라’ 소송서 패소

신안군 염전 노예 피해자가 1심 재판부 잘못을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18일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적장애인인 박씨는 2001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신안 소재 박모씨 염전에서 일을 하면서 임금 미지급, 감금 등의 피해를 당했다.

이후 염전 주인 박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그의 변호인은 1심 선고 3일 전인 2014년 10월13일 형사합의금 공판과 함께 박씨 명의의 처벌 불원사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하단

에 피해자 박00’이라고 인쇄된 글자와 박씨 자필 서명, 무인이 있었고 인감증명서 등은 첨부돼 있지 않았다.

이를 근거로 1심 재판부는 염전 주인 박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박씨가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으며 이 부분은 공소기각했다.

하지만 이후 ▲박씨가 이름만 쓸 수 있고 한글을 읽지 못했다는 점 ▲박씨 임시후견인이 염전 주인 박씨와 합의에 응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 ▲1심 재판부도 2014년 9월 공판 때 변호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취지를 전해들어 알고 있었다는 점이 문

제로 대두됐다. 검찰 역시 이를 문제삼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광주고법은 “염전 주인 박씨가 당시에 이르도록 원고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하면서도 검사 항소는 기각했다

이에 박씨 측은 “1심 재판부가 확인도 하지 않고 잘못된 사실을 인정했다. 장애인 학대범죄 피해자로서 재판 과정에서 인격적 가치를 실현할 기회를 잃어버렸고 왜곡된 의사가 부당한 양형이유로 반영됐다”며 국가는 정신적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민사 재판부는 박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뉴스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 농지매입비축사업
- 농지임대수탁사업
-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농지연금사업
- 농지규모화사업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20~39세 창업후계농에게 5~10년 장기임대차, 장기차리(30년, 1~2년 농지매입자금 용자 지원)
- 농지임대수탁사업**
자력 어려운 농지소유자 농지의 임대료 위탁받아 전입농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
- 농지연금사업**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농지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 지급

- 농지매입비축사업**
고령농업인 등 농업인 농지 매입비축을 통해 농지시장 안정 도모
-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자연재해 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보장, 경영 정상화 지원
-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입 임대차 교환분할을 통한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